

No. 2013-50

일본 경제 동향

(Japan Weekly Economic Digest)

2013. 12. 16

- ① 일본경제지표
- ② 주간경제이슈
: 선순환 실현을 위한 경제대책
- ③ 경제정책동향
- ④ 일본기업동향
- ⑤ 한국관련워치

1 일본경제지표

□ 주간 시황지표

- 엔화환율 : 미국의 양적금융완화의 조기축소 예상에 따른 엔 매도세로 약세
- 장기금리 : 엔저·주가상승에 따른 국채매도 증가세로 상승

구 분	12.9(월)	12.10(화)	12.11(수)	12.12(목)	12.13(금)
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달러당)	103.08	103.28	102.90	102.66	103.60
엔화의 대원화 환율(100엔당)	1,025.88	1,019.46	1,023.29	1,026.79	1,017.48
닛케이평균주가(종가)	15,650.21	15,611.31	15,515.06	15,341.82	15,403.11
장기금리(10년물 국채금리, 연리%)	0.660	0.665	0.655	0.660	0.695

□ 주요 거시경제지표

- 2013년 3분기 실질 GDP성장율은 전기비 0.5%(연율 1.9%)로 4분기 연속 플러스
- 2013년 10월 경상수지는 1.3천억 엔 적자로 9개월 만에 적자로 반전
 - * 엔저와 해외생산 확대에 의한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가 주된 요인
- 2013년 10월 소비자물가는 5개월 연속 전년수준을 상회

구분	2012	201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실질GDP증가율(연율,%)	1.2(2.0)	4.1			3.8			1.9(P)			-	-
수 출(천억엔)	639(637)	48	53	63	58	58	61	60	58	60	61	-
수 입(천억엔)	721(707)	64	61	66	67	68	62	70	67	69	72	-
對한국 수출	49.7(49.1)	4.01	4.25	5.21	5.07	4.61	4.54	4.77	4.59	4.57	4.64	-
對한국 수입	32.8(32.4)	3.12	2.92	2.81	2.58	2.85	2.57	3.04	2.78	2.72	3.29	-
직접투자(억달러)	(1,223)	234			331			479			-	-
對한국 투자	(40)	7.7			9.1			8.6			-	-
소비자물가(전기비,%)	▲0.2(0.0)	▲0.3	0.1	0.3	0.3	0.2	0.0	0.1	0.3	0.1	0.2	-
실업율(%)	(4.4)	4.2	4.3	4.1	4.1	4.1	3.9	3.8	4.1	4.0	4.0	-
경상수지(천억엔)	42.9(47)	▲3.6	6.4	12.5	7.5	5.4	3.4	5.8	1.6	5.9	▲1.3	-
엔화 對미달러 환율	82.9(80.1)	89.2	93.2	94.8	97.7	101.0	97.4	99.7	97.9	99.2	97.9	100.0
對원화(100엔)	(1,413)	1,197	1,166	1,161	1,148	1,100	1,165	1,130	1,142	1,095	1,090	1,064
외환준비(억달러)	12.5(12.7)	12.7	12.6	12.5	12.6	12.5	12.4	12.5	12.5	12.7	12.8	12.8
국채금리(10년, 연리%)	0.560	0.740	0.665	0.560	0.600	0.860	0.855	0.795	0.720	0.680	0.590	0.600

주 1. ()는 역년(1~12월)기준

2. 소비자물가, 실업률, 환율은 기간평균, 자료 : 닛케이신문, 재무성, 한국은행

3. (P)는 1차 속보치

□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report watching site)

- 『선순환 실현을 위한 경제대책』 일본 내각부, 12월7일
 - *출처: http://www5.cao.go.jp/keizai1/keizaitaisaku/2013/131205_koujyunkan.pdf
- 『경상적자에 접근, 산업공동화 리스크』 제일생명경제연구소, 12월13일
 - *출처: http://group.dai-ichi-life.co.jp/dlri/kuma/pdf/k_1312c.pdf

② 주간경제이슈 : 선순환 실현을 위한 경제대책

□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후퇴 방지와 경제의 선순환 실현이 목적

- 아베 내각은 「선순환실현을 위한 경제대책」이라는 명칭의 5.5조엔 규모의 경제 대책을 결정
 - 이번 경제대책은 금년 10월 소비세 증세 결정시 예정된 것으로서, 5.5조 엔의 국비 외에, 지방 부담과 정책금융을 합친 사업규모가 약 18.6조 엔에 달함
 - 교통망 정비를 비롯하여 경쟁력 강화책과 동일본대지진 피해에 대한 부흥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2014년 4월 소비세증세에 따른 경기후퇴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가계에 대한 현금지급과 공공사업 등 효과가 나타나기 쉬운 시책들을 담고 있음
 - 경쟁력 강화대책(국비 1.4조엔, 사업규모 13.1조엔)▷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에너지비용 대책▷2020년 동경올림픽 개최에 대비한 도시 인프라 정비▷지역, 농림수산업, 중소기업 등 영세 사업자 지원
 - 여성, 청년, 고령자, 신체장애자 대책(국비 0.3조엔, 사업규모 0.4조엔)▷여성의 활약 촉진, 육아지원·저출산 대책▷청년의 활약촉진, 고용대책▷고령자, 신체장애자 지원
 - 부흥·방재·안전대책의 가속화(국비 3.1조엔, 사업규모 0.4조엔)▷동일본대지진피해지역의 복구·부흥▷국토강인화, 방재, 사회자본의 노후화 대책, 원전사고 대응 등
 - 저소득자·육아세대에 대한 영향 완화, 가수요 및 이에 따른 수요 감소 완화(국비 0.6조엔, 사업규모 0.6조엔)
 - 경제의 선순환 실현▷부흥법인세를 1년 앞당겨 폐지

□ 소비세 증세 이후 수요 진작에 중점

- 그러나 현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년 6월 이후인데다, 현재로서는 공공사업 집행도 늦어질 공산이 큼
 - 따라서, 내년 4~6월 기간 중 경기후퇴를 방지하는 효과는 한정적이어서, 7~9월 기간 중 플러스 성장의 가능여부가 초점이 되고 있음
- 8%의 소비세율 인상으로 내년도 일본 정부의 세수증가분은 5.1조엔 정도
 - 이로 인해 소비자 심리가 악화되는 경우, 작년 말부터의 경기회복이 중단되고 디플레이션 탈출도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
- 경제대책에서는 2014년도 전반에(4~9월) 수요를 진작시키는 시책에 중점에 둔다고 명기

- 공공사업 중심의 방재·감재 대책 1.2조엔,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지급 등(0.6조엔)과 함께, 부흥특별법인세(약 0.8조엔)폐지도 내년 초 춘투에서 임금인상 결정의 마중물로 작용할 듯
- 5.5조 엔의 경제대책 재원은 경기회복에 따른 2013년도 세수증가분(약 2.3조엔)으로 조달되기 때문에 적자국채는 발행하지 않음

□ GDP의 1% 증대효과 기대

- 일본정부는 이번 대책이 1%정도의 GDP의 증가와, 25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효과가 침투되기에는 불투명한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급부는 6월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데다, 중소득층용 아동수당 인상도 지급이 여름이후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음
- 공공사업 집행도 4~6월 기간에는 시간적으로 불충분한 사업이 많은데, 전문가 등 일손 부족, 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입찰에 차질이 빚어지는 예도 많다는 지적
- 금년 2월, 통과된 10조엔 규모의 경제대책에 들어있던 5조엔 규모의 공공사업의 경우를 보면, 4~6월 기간의 GDP증가율을 끌어올릴 목적이었으나, 실제 효과는 7~9월 기간에야 나타났음

□ 추가 소비세 인상의 여건조성 여부는 불투명

- 10개 민간경제연구기관들의 평균 예측치에 의하면, 실질 GDP성장율은 소비세 증세 직후 내년 4~6월 기간에 ▲4.5%로 떨어지게 되나, 7~9월 기간에는 2.3%의 플러스 성장으로 복귀
- 경제대책을 실시하더라도 경기감속은 피할 수 없으나, 그 후에는 완만히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
- 재정자금의 투입으로 실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경우, 4~6월 기간 중 감속 폭이 클지도 모름
- 경기감속 폭이 크게 되면, 증세로 냉각된 소비자 심리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음
- 일본정부는 내년 말에 2015년 10월에 예정된 소비세율 추가 인상(10%)을 최종 판단하게 되는데, 증세 후 경기의 재 부양과 외수의 회복이 병행되면 10% 인상을 결정하기가 쉬어지나 그 시나리오가 실현될지는 아직 불투명

③ 경제정책동향

□ 일본정부, 인도네시아의 지하철건설에 엔 차관 1,400억 엔 공여

- 일본정부는 이르면 2014년에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도시개발을 위해, 1 400억 엔 규모의 엔 차관을 공여할 계획
 - 지연되고 있는 지하철과 송전선 개발을 가속화하여 일본기업들의 수주안건을 지원하기 위함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개발의 일환으로 도요타자동차와 닛산자동차 등의 공장 인근에 계획 중인 신항만을 2020년에 개항할 방침
- 인도네시아와 일본 양국이 추진하는 총 사업비 3조 엔의 자카르타수도권 투자촉진특별지역(MPA)정비에, 이미 엔 차관을 중심으로 1,130억 엔의 정부개발원조(ODA)를 결정했는데, 유·무상을 합한 일본의 자금협력 규모는 2,530억 엔
 -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엔 차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 1월까지 완성하여 일본 측에 제출할 예정
- 이번 엔 차관 공여대상은 인도네시아 최초의 지하철 대량고속교통시스템(MRT) 계획으로, 자카르타 중심부와 남부 교외의 15.7킬로미터를 연결하는 사업임
 -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일본의 건설회사 오바야시구미(大林組)와 시미즈건설(清水建設), 미쯔이스미토모건설(三井住友建設) 등의 수주가 결정되고 있으나, 자금조달 등의 면에서 진척이 늦어지고 있음
 -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의 자바섬과 수마트라섬을 잇는 송전선과 화력발전소 정비를 위해 엔 차관을 공여하기로 함
- 자카르타 수도권 정비구상은 2030년까지 각종 인프라를 정비하는 중장기계획으로, 일본이 사업조사단계에서 참여하여 일본기업들이 수주하기 쉬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일본과 인도네시아 양국 정부 간에는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문제와 세제, 무역제도 등에 대한 양국의 민관 협력도 추진하고 있음

4 일본기업동향

□ 일본 전자산업, 22년 만에 무역적자 기록할 듯

- 일본의 전자제품 수입액이 2013년에 처음으로 수출액을 상회할 전망이다, 금년 들어 9월까지 수입초과액은 약 8,000억 엔
 -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으로 엔저가 되더라도 수출은 부진한 반면, 스마트폰 등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
- 전자산업은 자동차와 함께 일본의 수출을 지탱해왔으나, 대내 신규 대형투자의 침체로 수입초과 기조가 정착될 가능성마저 있다는 분석
 - 일본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와 일본전기공업회에 의하면, 가전과 전자부품을 합친 전자산업의 무역흑자는 1990년대 초에는 9조 엔을 상회했으나, 버블 붕괴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거쳐 대폭 축소추세를 보이다가, 금년에는 1991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가 될 전망
 - 그동안 IT 버블 등으로 수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탓도 있으나, 리먼쇼크의 영향을 받은 2008년 이후 해외생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출이 대폭 감소
- 과거 일본의 전자산업을 이끌어왔던 TV는 금년 1~9월 기간 중 1,100억 엔의 수입초과
 - 파나소닉이 일본 국내에서 판매되는 많은 양을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하는 등, 일본 업체들의 브랜드가 주류이기는 하나 그 내용은 외국제품이었음
 - 1991년에는 일본 국내 TV시장의 80%가까이가 일본산이었으나, 2012년은 640만대의 내수판매분 중 수입품이 620만대에 달함
- 스마트폰의 수입 급증 영향도 큼
 - 일본정보통신네트워크산업협회에 의하면, 2008년에 약 2,000억 엔이었던 휴대전화의 수입초과액이 2012년에 1조 1,000억 엔으로 확대된데 이어 금년은 9월까지 1조 엔을 상회
 - 소니가 3월에 일본 국내생산에서 철수한 외에, NTT도코모의 아이폰 수입 영향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
- 일본기업들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전자부품·디바이스의 1~9월 수출초과액은 2조 2,100억 엔으로 전년동기비 5% 감소
 - 일본 국내 6대 부품업체들의 금년 3분기 수주액은 분기 베이스로 과거 최고로 호조를 보였으나 증산분의 많은 양을 해외생산으로 충당

- 국내생산의 감소는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경제산업성에 의하면 전기 기계 완성품업체의 종업원 수는 2010년도 시점에서 30만 명으로 1995년 이후 30% 감소
- 일본의 완성품업체들은 해외생산을 추진과정에서, 한국기업의 대두 등으로 글로벌 사업수지면에서도 적자가 두드러진 기업들이 많다고 닛케이신문은 보도
 - 미세화기술 등의 우위성을 살려, 웨어러블 단말기 등 신제품·부품 개발을 통하여 여하히 자사의 존재감을 보여줄 것인가가 과제로 되고 있음

□ 혼다, 중국에서 저가 하이브리드(HV)차량 공동개발·판매

- 혼다자동차가 중국에서 제후기업과 저가하이브리드(HV)차량을 공동개발·생산하여 발매할 계획임
 - 중국정부가 대기오염대책의 일환으로 에코 카(친환경차)보급에 주력하고 있어 혼다자동차가 100만 엔대 중반의 저가차를 투입하기로 한 것임
- 혼다가 중국의 동풍기차집단과 광주기차집단과의 합작 거점에서 개발·생산하게 될 HV차량은 소형차 피트 시리즈가 기본이 될 전망
 - 중국시장 판매가격은 현재 일본에서 판매하는 세계 최저가 차량인 피트하이브리드의 가격 164만 5,000원 수준까지 인하할 예정이며, 연간 수천대 규모로 생산을 개시하여 판매상황을 보면서 2만~3만대까지 늘려나갈 계획
- 혼다는 2종류의 HV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휘발유 엔진을 모터로 보완하는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
 - 동 시스템은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설계·제조기술을 이전하기가 쉬우며, 현지 부품업체의 부품과 설비로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도 재검토할 계획
- 현재 중국에서 판매하는 피트하이브리드는 일본으로부터 수출하기 때문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어 가격이 179,000엔으로 같은 급의 휘발유 차량보다 2배나 높음
 - 이 때문에 3개 HV차종의 대중국 판매대수는 금년 1~11월 누계로 133대에 그침
- 중국정부는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자동차(EV)에 대하여 최대 60,000위안의 구입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음
 - 중국정부는 대기오염 등의 문제 때문에 금년 5월에 EV와 가정에서 충전할 수 있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V)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2020년까지 500만대를 보급시키는 새로운 연비규제를 도입할 계획임
 - 중국 현지에서 에코카 개발 의지가 강해짐에 따라, 혼다와 도요타는 현지 업체의 기술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공동개발을 추진함으로써 HV차량에 대한 구입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겠다는 전략

5 한국관련워치

□ 한국과 중국, 금형 분야에서 일본을 추격

- 금형기술을 통한 기술력 향상으로 일본을 급속히 추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과 중국이라고 닛케이신문은 보도
 - 과거에는 금형이라 하면, 일본이 주도했으나 한국과 중국 모두 이제는 어엿한 수출대국으로 성장
- 고도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금형기술 분야에서는 일본이 아직은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정책적으로 금형산업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존재는 분명히 일본에 위협적이라는 것
- 1990년대 전반까지 일방적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한국은 이제 수출국으로 성장
 - KOTRA에 의하면, 2012년 금형생산은 일본에 육박하는 약 100억 달러로 그 중 1/4을 일본과 중국, 미국 등에 수출
 - 그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2004년 정부지원으로 설립된 일명 금형특구로 불리는 광주공업단지로서, 입주기업들이 금형의 시험설비를 이용할 수 있고 보조금도 큰 편
 - 그동안 금형 업체 수는 한국 전체로 약 7,000개로 증가했고, 현재 금형의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하이테크센터가 건설 중인데 정부가 자금의 일부를 부담
- 중국이 주력 거점인 대만의 홍하이정밀공업에는 금형기술자 약 3만 명이 있는데, 동사만으로 일본 금형기술자의 1/3 규모
 - 동사는 금형이야말로 모노즈쿠리의 기본이라며 금형학교에서 청년들을 6개월간 교육시켜 매년 약 6,000명의 졸업생을 각 공장에 투입
- 중국에는 일본의 10배 이상인 10만개사가 넘는 금형업체들이 있음
 - 공정을 세분하여 인해전술로 금형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고, 생산규모를 급속히 확대해 가고 있음
 - 2009년에 수출이 수입을 상회, 2012년 수출액은 30억 달러로 일본에 육박